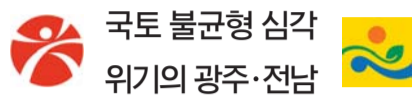


## 인구가 경쟁력 ... 광주 150만·전남 200만 시대 열자



광주·전남이 해방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국토 불균형 정책에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탈·착취의 대상, 군부독재기 경제 개발 소외 및 낙후의 대명사였던 광주·전남은 영남권에 이어 최근 세종시 중심의 충청권에까지 밀려나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부에서조차 과거 불균형에 대한 시정없이 이를 고착시키는 균형 배분,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중심의 국가 정책 등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아발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각계의 의견을 담아 이번 시리즈를 게재한다.

광주일보가 정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1960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전남의

### 경제는 영남에 밀리고 행정은 충청에 밀려 끝없는 인구 유출 낙후·소외지역 범국가적 지원해야 진정한 국토 불균형 해소

#### 〈1〉 인구 회복 최대 과제

인구를 분석한 결과 1960년 전체 인구(2499만여명)의 14.22%(355만여명)에 달했지만, 55년이 지난 2015년 6.33%(517만여명 중 327만여명)로 급락했다. 1970년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을 잇는 경부축 중심으로 산업·경제 전반이 급속히 재편되면서 광주·전남에서의 인구 유출은 불가피했다. 1980년까지는 10%선을 유지했지만, 1990년 8.40%, 2000년 7.26%, 2010년 6.62% 등 매년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남은 200만명 선이 무너졌고, 광주는 150만명 선을 넘지 못하고 인구 정체·감소기에 접어들었다.

전남도는 가임기 여성(15~49세)이 급감하면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연령 평균 7600여명의 청년층이 교육, 취업 등

을 목적으로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후지인 전남의 인구 감소는 중심도시인 광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전남 인구 감소의 원인은 국가 불균형 정책, 즉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재정 및 민간 자본의 집중 투자 때문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수축산업 중심의 전남, 전남의 물자가 소비되는 중심도시인 광주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이 고향을 떠난 것이다.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갖가지 균형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광주·전남의 소외·낙후는 크게 시정되지 못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 행정중심 도시를 조성하고, 국가 재정을 현 인구 및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누는 등의 국가균

형발전정책은 광주·전남의 인구를 계속 감소하게 한 것이다. 지난 6월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1000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201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부터 매년 2만명 이상이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집을 싸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은 급기야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에 비한 '소멸위험지수'가 0.44로, 소멸위험(0.2~0.5)군에 속해 있는 것이다. 전남은 지난 2013년 0.55였다. 점에서 향후 10년 뒤에는 전국 최조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역시 2013년 1.44였으나, 6년 뒤인 2019년에는 1.01로 급감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부터 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도민 200만 회복 전환점 마련을 위한 전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집행에 나서고 있지만 하락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유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대기업의 유치, 대규모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열악한 형태의 전남도가 오히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전남도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중인 '인구소멸지역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인구소멸지역의 인구유출 완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에는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고향사랑세 도입, 국가보금보조 차등지원, 지방세제 혜택,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 배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인구, 기업, 대학 등의 이전을 권장하고, 장기적이면서 대폭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일정기간 동안 대규모 국책·시범사업 등을 집중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정책은 충청권까지 포함된 거대 중부경제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이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고려한 실질적인 재정 분권, 대학·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추진,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감소 및 낙후지역에서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낙후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국가의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인구 200만, 광주 인구 150만 달성을 위해서는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위한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대학 경쟁력 향상 및 상위권 대학 이전, 출산율 향상을 위한 가임 여성 및 부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직장 여성 육아 지원, 아동 교육의 질 향상 등과 관련 정부의 보다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활기 되찾은 광주 충장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 0시부터 1단계로 완화 조정된 가운데 휴일인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일상으로 복귀

### 방역관리 수칙 준수 전제 위반시 처벌 강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철저한 방역관리·수칙 준수를 전제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고, '정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관련 기사 3면〉 이번 완화 조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및 정부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도는 다만 방역관리와 방역수칙 위반시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12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 등 일부지역과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오후 5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광주는 지난 8월 23일 수도권발 지역감염이 확산한 이후 오늘(11일)까지 50일째 2단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모두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시민 모두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덕분에 추석 연휴 이후 11일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1단계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

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

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지난 6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를 막고자 이렇듯 도로 통제 등에 협조해 준 국민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며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상-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8월 20일 오픈  
T.372-6666

새 KAIT 한국자산신탁  
새삼건설 배너 삼일루체아

홍보관: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